

플랜트 엔지니어링 수출 “비상”

미국의 WMD 관련 자산동결 발표로 ... 석유화학도 규제대상

미국 정부가 이란, 시리아, 북한 등에 수출금지 전략물자를 공급한 세계 모든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란에서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기업과 북한 개성공단 관련기업들이 자칫 도산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월29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 있는 이란, 시리아, 북한 기업이 현재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산동결 조치는 3개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회사 뿐만 아니라 거래한 모든 미국 내외의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심상근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미국은 이제까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테러지원국에 공급한 회사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만 취해왔으나, 이번에는 수출 금지와 더불어 현금예금 등 미국 내 자산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어서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이란 등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건설기업들이 미국의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광구 개발장비 중 일부가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석유화학 플랜트 중 일부는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조치를 잘 모르고 무심코 수출했다가는 회사 자체가 망할 수 있으며, 계열사의 미국 내 자산도 묶여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의 플랜트 시장에는 국내 대형 건설기업 및 엔지니어링기업 대부분이 진출해 있다.

<화학저널 2005/07/04>